



민중당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국회의원 **황명선**

보도자료
PRESS KIT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11호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5 인본빌딩 3층
T. 02-784-9820 / F. 02-6788-6115
T. 02-784-9820

보도일시	참고자료	사진	문의
2024. 10. 28.(월) 배포즉시 보도가능	-	-	황명선의원실 02-784-9820

황명선 의원, “세무플랫폼 문제해결 위해 국세청이 적극 나서야”

-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플랫폼 문제점 지적… 이후 국세청은 무책임한 답변
- 황명선 의원, “허위과장광고는 국세청이 조사의뢰하고 플랫폼 업체 간담회 정례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세무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명선 의원은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플랫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와 개인정보유출, 과다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황 의원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명선 의원은 “지난해 서울지방청 공문을 통해 국세청은 이미 세무플랫폼에 의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경정청구 환급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법령상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못한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황명선 의원은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허위과장광고는 국세청이 사례조사해서 공정위에 조사의뢰하고 세무플랫폼과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2024년 6월경 서울지방국세청이 발송한 공문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세무 플랫폼 사업자의 성실신고 협조 요청

1.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귀 사에서 대량 제출한 기한후 신고 및 경정청구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례 등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환급세액에 대해 오인과 혼란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귀 사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과도한 경정청구, 국세청과 무관한 귀 사 관련 업무문의 등으로 업무 장애가 발생되어 원활한 국세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 아 래 》

-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미 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에 대해 추가로 인적공제가 가능 한 것으로 안내
- 기한후 신고나 환급 신청 시 세무서 담당자 성명을 직접 기재하여 납세자가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플랫폼 오류사항, 결제 환불 사항이나 플랫폼 개선 건의사항 등 국세행정 업무와 관계없는 귀 사의 업무를 문의
- 세무 플랫폼 광고성 미수령 환급금 문자를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으로 오인
- 기한후 신고 및 경정청구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나 납세자는 확정된 금액으로 인식하여 안내된 금액과 실제 환급액의 차이로 인해 민원 야기
- 환급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미점부로 세무서 담당직원이 서류를 요청하여 과도한 행정력 낭비 초래

국회의원 황명선

최근 5년간 경정청구 평균 처리일 현황

접수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4.6.
평균처리일(일)	25	29	26	28	29	33
2개월 이내 미처리 건수(천건)	4,000	4,000	4,000	4,000	8,000	6,000

출처: 국세청 제출자료

국회의원 황명선